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3회

자료 성격: 출제기준형 · 2026-10-03 · 문항 수: 80 · 근거 기준일: 2026-09-15

성명		점수	/ 100
----	--	----	-------

2026-09-16 전면 교체한 자체제작 예상문제. 작성 기준일 2026-09-15. 전체 정답·현행법령·의미중복 최종
검수와 시험 관리기관 직접 원본 대조는 미완료입니다. 정답·해설은 웹에서 확인하세요. 정답과 해설은
license.3001.co.kr의 같은 제목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1. 공공도서관 사업에서 ㉠ 책장 구매, ㉡ 운영방안 연구, ㉢ 건물 증축을 각각 독립 발주한다. 기본 대상물
분류로 적절한 것은?

- (1) ㉠ 물품, ㉡ 용역, ㉢ 공사
- (2) ㉠ 용역, ㉡ 물품, ㉢ 공사
- (3) ㉠ 물품, ㉡ 공사, ㉢ 용역
- (4) ㉠ 공사, ㉡ 용역, ㉢ 물품

2. 조달의 간접 지원 주체와 주된 기여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1) 조달교육기관—입찰평가 없이 특정 교육생의 낙찰 확정
- (2) 시험·인증기관—수요기관을 대신해 모든 예산을 편성
- (3) 관련 산업협회—모든 회원사의 낙찰가격 공동 결정
- (4) 시험·인증기관—기술·품질 관련 객관적 확인 지원

3. 공공조달의 다층적 감독구조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1) 기관 내부 감사가 있으면 외부 감독은 개념상 성립하지 않는다.
- (2) 공공조달의 감독은 최종 이용자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3) 기관 내부 감사와 국회·감사원 등의 외부 감독을 구분할 수 있다.
- (4) 공급업체 영업부서가 수요기관의 외부 감사권을 전담한다.

4. 질의에 대한 답변이 구매요구사항의 해석에 영향을 준다. 법령상 보호해야 할 비밀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투명한 조달 운영에 가까운 대응은?

공개 범위는 적용 법령과 절차가 허용하는 범위로 한정하며 구체적 공고 변경기간을 묻지 않습니다.

- (1) 담당자의 설명은 기록하지 않고 구두 전달로만 처리한다.
- (2) 자료의 성격과 관계없이 영업비밀까지 함께 공개한다.
- (3) 공식 절차로 답변을 기록하고 관련 참가자가 동등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4) 질문한 업체에만 유리한 해석을 알려 주고 다른 업체에는 알리지 않는다.

5. 중앙집중 구매의 표준화 효과를 검토할 때 적절하지 않은 판단은?

- (1) 반복 수요가 큰 공통 품목을 우선 조사한다.
- (2) 공통 규격과 기관별 필수 추가요건을 구분한다.
- (3) 규격 통합으로 생기는 비용 절감과 기능 손실을 함께 비교한다.
- (4) 사용환경이 달라도 모든 기관의 세부 요구를 검토 없이 하나의 규격으로 통일한다.

6. '일반경쟁으로 공고하고, 공개된 적격심사 기준으로 낙찰자를 정한다'는 설명에서 서로 구분해야 할 두 항목은?

- (1) 예산의 재원과 지급 통화
- (2) 조달수요자와 최종 사용자의 수
- (3) 경쟁참가 범위를 정하는 방식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 (4) 계약보증의 기간과 하자보수의 장소

7. 지명후보를 고르기 위해 기술능력만 조사했는데, 후보 업체 대부분이 같은 기간 대형 계약을 수행하여 공급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 검토로 적절한 것은?

- (1) 유명 업체의 명부가 있으면 현재 계약부하는 무관하다.
- (2) 공급 여력이 없는 업체를 더 많이 지명하면 부족 문제가 해소된다.
- (3) 기술인증이 있으면 생산능력과 납기는 조사하지 않는다.
- (4) 해당 납기에 실제 공급할 능력과 시장의 수급 여건을 확인한다.

8. 가상 기관규정은 간소구매 대상 여부를 부가세 제외 금액 100만 원 이하로 판단한다. 물품 건적 총액은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110만 원이고 별도 비용은 없다. 이 가정에 따른 판단은?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 (1) 부가세 제외 금액이 100만 원이므로 금액조건을 충족한다.
- (2) 110만 원의 10%를 빼면 99만 원이므로 그 금액으로 판단한다.
- (3) 금액조건을 충족하면 납품 확인과 지출 증빙도 면제된다.
- (4) 총액이 110만 원이므로 금액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9. 기관이 소싱 중심 기능을 도입한 뒤 전자적 구매·지불 기능을 연결하려 한다. 전자조달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1) 두 기능을 통합하면 공급자 탐색업무가 법적으로 모두 금지된다.
- (2) 소싱 기능과 구매·지불 기능은 개념상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 (3) 소싱을 도입하면 주문·송장·지급 자료의 연계는 자동 완성된다.
- (4) 유형은 업무 중점을 구분한 것이므로 한 통합체계 안에 함께 구현할 수 있다.

10. 벤처나라가 주로 지원하려는 정책 대상과 목적의 조합은?

- (1) 공무원의 개인용 가전 구매 보조
- (2) 벤처·창업기업 제품의 공공조달 판로 진입 지원
- (3) 국가 소유 토지의 경매 전용 지원
- (4) 대기업의 해외 주식 매매와 배당 지원

11. 클라우드 자원 제공,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클라우드와 다른 기술의 융합서비스를 구분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1) 모두 물품 폐기 업무에만 해당한다.
- (2) 컨설팅이 포함되면 세 유형 모두 디지털서비스에서 제외된다.
- (3) 클라우드서비스 /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 융합서비스
- (4) 모두 건물 신축공사에 해당한다.

12. 적절한 세부품명은 이미 존재하지만 새로 공급할 모델에 대한 식별번호가 없다. 우선 검토할 절차는?

- (1) 기존 세부품명 아래 새 품목의 등록 신청
- (2) 기존 다른 모델의 번호를 임의로 차용
- (3) 물품분류번호 없이 업체명만 계약대상으로 표시
- (4) 같은 뜻의 세부품명을 무조건 신설

13. 국내에서 개발된 새 상품을 국제 분류체계에 반영하려 한다. 교재에 설명된 접근으로 적절한 것은?

- (1) 대상 분류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신청자료를 작성·번역하여 국제 관리체계에 제안한다.
- (2) 국제분류는 존재하므로 어떤 신규 상품도 제안할 수 없다.
- (3) 국내 업체가 상품명을 바꾸면 국제분류도 자동 개정된다.
- (4) 국내 식별번호를 삭제하면 국제분류가 신설된다.

14.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관리하는 기관이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한다. 이 관리와 개별 계약의 낙찰자 선정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 (1) 연간 목표비율만큼 모든 개별 계약의 수량을 같은 비율로 나누어 낙찰한다.
- (2) 연간 구매구성과 실적을 관리하되, 개별 낙찰은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참가·평가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3) 연간 목표를 달성하면 이후 입찰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요건도 해제된다.
- (4) 연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가장 높은 가격의 중소기업을 우선 낙찰한다.

15. 직접구매 대상 공사의 자재목록에 지정 대상인 자재 X와 대상이 아닌 자재 Y가 함께 있다. 담당자는 “공사가 대상이므로 모든 자재를 동일하게 직접구매해야 한다”고 한다. 적절한 검토는?

- (1) 공사에 적용되는 요건과 개별 자재의 대상품목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 직접구매 범위를 정한다.
- (2) 자재 하나가 대상이면 공사계약 자체를 물품계약으로 변경한다.
- (3) 공사가 대상이면 자재 지정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 (4) 공사 총액만 기준으로 자재의 절반을 임의 선정한다.

16. 새 포장재는 운송 중 중량을 줄이지만 제조단계의 에너지 사용과 폐기단계의 처리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검토에서 우선 보완할 것은?

- (1) 포장재의 단가 상승률을 환경오염 감소율로 대체한다.
- (2) 제조와 폐기는 공급자 영역이므로 구매의 환경평가 범위에서 제외한다.
- (3) 운송단계의 개선이 제조·폐기단계로 환경부담을 옮긴 것은 아닌지 함께 비교한다.
- (4) 운송 중량이 감소했으므로 모든 단계의 환경영향도 감소한 것으로 정리한다.

17. 가상의 우수제품 심사 안내는 특정 인증 경로에서 별도 품질소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규정의 해석으로 적절한 것은?

어떤 인증 경로가 현행 제출 생략 대상인지의 목록은 묻지 않습니다. 제시된 규정의 해석 문제입니다.

- (1) 신청인이 원하면 모든 인증 경로에서 자료를 생략한다.
- (2) 생략 가능한 자료가 있으면 적용기술 자료도 함께 생략한다.
- (3) 별도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며, 제품의 품질과 신청요건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 (4) 서류 생략은 품질 불합격 제품도 지정한다는 뜻이다.

18. 가상 실적규칙은 위탁업체가 해당 기관 업무에 사용하려고 실제 구입한 중증장애인생산물 금액만 간접구매 실적으로 인정한다. 청소위탁 계약 5천만 원 중 증빙된 해당 생산물 구매액은 120만 원이다. 인정액은?

실적 인정 규칙과 금액은 지문 조건입니다. 실제 보고에서는 해당 연도 지침과 구매증빙을 별도 확인합니다.

- (1) 0원이다.
- (2) 5,120만 원이다.
- (3) 120만 원이다.
- (4) 5천만 원이다.

19. 공급업체들이 ESG 정책을 선언했지만 실제 이행 정도는 다르다. 계약 관련 ESG 활동을 비교할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계약 목적에 관련된 ESG 항목이 적법하고 사전에 공통 기준으로 정해졌다는 가정입니다.

- (1) 기부금 총액 하나를 모든 ESG 영역의 점수로 동일 대체한 표
- (2) 사전에 정한 지표·측정기간·확인 방법에 따른 실제 이행자료와 개선 기록
- (3) 업체 홈페이지의 ESG 글자 크기와 홍보영상 재생 횟수
- (4) 기업 규모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최고등급을 부여한 내부 메모

20. 귀책 있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상대방은 “해제했으니 손해배상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551조를 기준으로 한 설명은?

해제는 적법하고 별도의 면책·책임제한 약정 문제는 없습니다.

- (1) 해제 자체가 손해배상청구를 막지는 않으며, 배상책임의 요건은 별도로 판단한다.
- (2)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제한 계약을 먼저 다시 체결해야 한다.
- (3) 해제를 선택하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권을 모두 포기한 것으로 본다.
- (4) 해제하면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주장 금액 전부를 배상한다.

21. 1년 단가계약의 부가가치세 제외 예정 단가는 개당 4만 원, 예상 구매량은 600개이다. 실제 월별 주문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주어진 자료로 계산한 추정가격은?

단가와 수량은 가상이며 최소 주문보장 여부를 묻지 않는다.

- (1) 4만 원
- (2) 2천4백만 원
- (3) 실제 주문이 종료될 때까지 어떠한 추정가격도 산정할 수 없다.
- (4) 2백만 원

22. 국가가 물품을 사는 입찰이 아니라, 적법한 처분절차에서 대금을 받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계약을 검토한다. 교재의 일반적인 낙찰 원칙에 부합하는 것은?

개별 특별법이나 해당 계약의 특례가 없는 일반 원칙 사례이다.

- (1) 수입계약은 가격 경쟁을 사용할 수 없고 기술평가만으로 선정한다.
- (2) 국가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 최저가격 입찰자를 선정한다.
- (3) 수입계약에서는 예정가격과 무관하게 가장 먼저 접수한 자를 선정한다.
- (4) 예정가격 이상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정하는 수입계약 원칙을 검토한다.

23. 2026년 6월 11일 시행 국가계약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이의신청 기간의 조합은? 기간의 기산·휴일 계산 문제는 제외한다.

- (1) 행위일부터 30일 이내이며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기간은 없다.
- (2)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25일 이내
- (3) 행위일부터 25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30일 이내
- (4) 행위일부터 20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15일 이내

24. 수요기관과 조달청 사이에 적용 규정의 차이로 계약방법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조달사업법의 교재 설명에 맞는 처리 가능성은?

- (1) 협의가 한 번 실패하면 해당 수요기관은 앞으로 모든 조달요청 자격을 잃는다.
- (2)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도 계약방법이 합의된 것으로 간주해 집행한다.
- (3) 계약방법이 다르면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법령을 임의로 폐지할 수 있다.
- (4) 협의 불성립 시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하는 방식 등 규정상 처리 경로를 확인한다.

25. 조달기업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1) 해외조달 지원을 받는 기업에는 외국의 참가자격과 계약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2) 시장정보·교육·교류 등의 지원과 외국 발주기관의 실제 낙찰 판단은 구별된다.
- (3) 해외 정보 지원은 국내 공공조달과 연계될 수 없으므로 지원 대상 업무가 될 수 없다.
- (4) 국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외국 공공계약의 낙찰도 보장된다.

26. 입찰자가 중요한 입력 오류로 전자입찰 취소 절차를 밟았다. 교재가 설명하는 취소 후 참가 제한을 판단할 때 적절한 구별은?

- (1) 취소한 같은 입찰에 다시 제출하는 경우와 별도로 실시되는 재입찰·새 공고를 구분한다.
- (2) 취소한 입찰서를 같은 공고에 원하는 횟수만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3) 한 번 취소하면 해당 업체는 모든 기관의 모든 향후 입찰에서 영구 제외된다.
- (4) 취소가 승인되면 원래 입찰서와 새 입찰서 중 높은 순위를 자동 선택한다.

27. 공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위탁 의무가 문제 되는 계약에서 “우리 직원이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말만으로 위탁을 생략하려 한다. 적절한 검토는?

- (1) 기관이 빠르다고 판단하면 모든 법정 위탁 의무가 면제된다.
- (2) 규칙상 위탁 예외 사유의 해당 여부와 요구되는 협의·근거를 확인한다.
- (3) 계약금액을 여러 장의 내부 결재서로 나누면 예외 사유가 자동 성립한다.
- (4) 위탁 대상 제품은 기관이 어떠한 전문성을 갖추어도 예외를 검토할 수 없다.

28. 제출된 실적증명서와 발급기관의 회신 내용이 다르다. 허위서류 쟁점을 검토하기 위한 적절한 증거 정리는?

- (1) 제출본·발급기록·회신의 차이와 작성·제출 경위를 정리하고 당사자의 설명을 대조한다.
- (2) 내용이 다르면 누가 작성했는지와 어떤 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결론낸다.
- (3) 서류에 도장이 있으므로 발급기관이 부인해도 추가 확인은 하지 않는다.
- (4) 업체가 최신 서류를 다시 내면 이전 제출행위에 관한 기록을 모두 지운다.

29. 납품 지연이 발생하자 공급자는 통제 불가능한 사고를, 기관은 준비 부족을 원인으로 주장한다. 아직 사실 확인 전인데 귀책 해제 서식을 완성하려 한다. 우선 필요한 기록은?

- (1) 지연이 있다는 결과만으로 귀책사유도 항상 확정된다.
- (2) 불가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모든 계약상 의무가 자동 면제된다.
- (3) 사고 발생 시점·영향 범위·예방 및 대응 가능성과 실제 준비 상태를 확인한 자료이다.
- (4) 기관이 계약서 양식을 고르면 사실관계도 그 양식에 맞추어 바뀐다.

30. 국가계약법 제27조가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의 중심적인 조치는 무엇인가?

해당 조치의 성격만 묻고 제재기간·수의계약 예외·감면의 개별 요건은 묻지 않습니다.

- (1) 모든 계약상 채무를 별도 검토 없이 소멸시키는 조치
- (2) 이미 지급한 모든 계약대금을 사유와 관계없이 회수하는 조치
- (3) 계약상 손해액을 산정하는 민사상 감정 절차
- (4)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31. 조달청에 구매를 요청하지 않고 자체 발주하는 기관의 수요까지 조사하려 한다. 조사 범위를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적절한가?

- (1) 관심 기관의 자체 계약정보와 발주계획도 함께 조사한다.
- (2) 조달청에 요청한 구매만 전체 공공수요로 간주한다.
- (3) 기관별 자료는 형식이 다르면 모두 제외한다.
- (4) 중앙조달과 자체조달 실적을 구분 없이 중복 합산한다.

32. 낙찰 후 공급계획을 검토한다. 납품까지 자재 확보 8일, 제조 12일, 시험 3일, 운송 2일이 순서대로 필요하고 작업은 겹칠 수 없다. 착수 후 납기까지 30일이 확보됐다면 총 소요기간과 여유기간은?

가상의 기간입니다. 각 일수는 동일한 작업일 기준이며 대기·휴일·추가 공정은 없고 법정 착수기한을 묻지 않습니다.

- (1) 총 27일, 여유 3일
- (2) 총 12일, 여유 18일
- (3) 총 25일, 여유 5일
- (4) 총 23일, 여유 7일

33. 표준 장비 공급만 해 온 업체가 현장 설치와 계속 유지관리까지 요구하는 사업에 참여한다. 공급방법의 적정성 검토에서 중요한 변화는?

- (1) 부수 서비스는 견적과 일정에서 제외한다.
- (2) 물품의 모델이 같으면 서비스 수행체계는 불필요하다.
- (3) 제품 인도 외 설치·유지관리 수행체계까지 검토해야 한다.
- (4) 설치가 포함되면 모든 조건은 종전 납품계약과 같다.

34. 가상의 제조에 수입 부품 10,000달러가 필요하다. 환율을 달러당 1,300원에서 1,430원으로 바꾸고 달러가격·수량은 일정하게 두면 원화 원가 증가는?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 (1) 1,300만원
- (2) 130만원
- (3) 1,430만원
- (4) 13만원

35. 작년 구매액이 급증했지만 대부분은 한 번만 수행한 청사 신축사업이었다. 장기 공급기회 평가로 적절한 것은?

- (1) 가장 큰 한 건이 있으면 기관별 비교는 필요 없다.
- (2) 작년 증가율을 아무 조정 없이 매년 복리 적용한다.
- (3) 신축사업이 있었으므로 향후 모든 수요가 0이라고 본다.
- (4) 일회성 사업과 반복 수요를 분리해 다년간 실적을 검토한다.

36. 연간 구매액 비중은 낮지만 공급처가 제한돼 조달이 끊기면 설비가 멈추는 부품이 있다. 구매 포트폴리오에서 이 부품의 특성과 우선 검토할 방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본 문항에서 구매액 비중과 공급위험 수준은 제시된 사실로 확정합니다.

- (1) 레버리지 품목 — 다수 공급처의 가격경쟁만 중점 검토
- (2) 전략적 품목 — 전체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고 전제
- (3) 병목 품목 — 공급 지속성과 대체 가능성을 중점 검토
- (4) 일상 품목 — 공급중단 영향은 작으므로 발주 편의만 검토

37. 가상의 공식 의견제출 안내는 “개정안 조항, 의견, 이유, 수정안”을 구분해 작성하도록 정했다. 업체가 새 실적요건이 신규기업을 과도하게 배제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검토 가능한 제출내용은?

의견서 항목은 문제에 제시한 가상 제출안내입니다.

- (1) 담당자에게 낙찰을 약속받는 조건으로 찬성한다고 제출한다.
- (2) 해당 조항을 특정하고 배제 효과의 근거와 함께 대체 가능한 실적 인정기준을 제시한다.
- (3) 의견 대신 다음 입찰의 가격제안서만 보낸다.
- (4) 반대 문구만 반복하고 어떤 조항인지 적지 않는다.

38. 내륙 창고 납품 단가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공개규격에는 여러 섬 지역에 분산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예산 검토 의견의 핵심은?

- (1) 도서 납품이면 모든 가격자료는 사용할 수 없다.
- (2) 운송·설치 조건 차이로 생기는 추가 비용을 산정해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 (3) 설치비는 물품 예산과 어떤 경우에도 관계없다고 본다.
- (4) 물품 모델이 같으므로 공급조건 차이는 무시한다.

39. 공고문에는 제출 마감이 14일 14시, 첨부 제안요청서에는 15일 14시로 적혀 있다. 업체가 임의로 늦은 날짜를 선택하려 한다. 적절한 준비는?

- (1) 첨부파일이 더 길므로 그 날짜가 항상 우선한다.
- (2) 모순을 공식 질의하고 권한 있는 정정·안내로 확정된 제출기한을 확인한다.
- (3) 서로 다른 두 날짜의 평균 시각을 마감으로 본다.
- (4) 업체가 기억하기 쉬운 날짜를 선택해 내부 일정만 고친다.

40. 가상 입찰은 보증금액 200만 원을 충족하는 보증증권 제출을 허용한다. 증권의 보증금액은 200만 원이고 발급 수수료는 2만 원이다. 요건 대조의 기준은?

- (1) 수수료가 낮으면 보증기간·대상 입찰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 (2) 수수료가 2만 원이므로 보증금도 2만 원만 확보된 것이다.
- (3) 보증금액에 수수료를 더한 202만 원을 보증받은 것이다.
- (4) 발급 수수료가 아니라 증권에 표시된 보증금액과 보증조건을 확인한다.

41. 보안상 인터넷에 올리지 않는 도면이 제안에 필요하다. 기관은 비밀유지 약정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하도록 안내했다. 업체의 적절한 준비는?

- (1) 공고된 보안·열람 조건을 충족하고 허용된 범위에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한다.
- (2) 도면을 보지 못했다며 자신에게만 보안요건 면제를 요구한다.
- (3) 경쟁업체의 직원에게 비공개 도면을 개인적으로 받아 사용한다.
- (4) 입찰 준비 목적이라면 보안도면을 공개 게시해도 된다.

42. 업체의 직원이 대표자를 대신해 서면입찰서를 제출한다. 공고는 대리인 지정·위임 증빙을 요구한다. 직원 신분증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설명에 대한 판단은?

- (1) 직원 신분 확인과 해당 입찰의 적법한 대리권·지정 증빙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 (2) 대리 제출은 모든 공공입찰에서 금지된다.
- (3) 회사 명함이 있으면 요구된 위임서류가 자동 작성된다.
- (4) 직원이면 모든 계약행위를 위임 없이 대리할 수 있다.

43. 가격개찰에서 A가 1순위로 표시되었으나 적격심사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 기관의 안내 문구로 적절한 것은?

- (1) 가격개찰상 우선 심사대상이며 후속 심사와 낙찰 결정이 남아 있다.
- (2) 적격심사를 하지 않아도 모든 이행의무가 종료된다.
- (3) 가격 순위만으로 계약서 서명까지 완료되었다.
- (4) 개찰 1순위는 어느 절차에서도 낙찰자가 될 수 없다.

44. 구매결의서에 계약방법은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로 적혀 있다. 담당자가 둘 중 하나만 남겨야 한다고 한다. 적절한 이해는?

- (1) 적격심사를 정하면 제한경쟁이 자동 수의계약으로 바뀐다.
- (2) 제한경쟁이면 낙찰자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적격심사를 삭제한다.
- (3) 참가 범위를 정하는 경쟁방법과 참가자 중 낙찰자를 고르는 평가방법을 각각 기록한 것이다.
- (4) 두 용어는 같은 절차의 완전한 동의어이므로 아무것이나 지운다.

45. 수의계약 적용사유와 계약대상자는 적법하게 확인되었다. 담당자는 공급자 한 곳과 거래하므로 가격조사도 필요 없다고 한다. 적절한 절차는?

- (1) 수의계약이면 공급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제한 없이 수락한다.
- (2) 가격조사를 하면 수의계약 사유가 자동 소멸한다.
- (3)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원가와 가격도 검증된다.
- (4) 수의계약 가능 여부와 별도로 견적·원가·시장정보 등으로 계약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46. 가상 평가규칙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각 한 개씩 제외한 뒤 나머지 평균을 계산한다”고 정했다. 위원 5명의 점수가 60·60·75·80·90점일 때 최종점수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시된 가상 집계 규칙만 적용합니다. 모든 평가위원회가 동일한 집계 규칙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 (1) 75.00점
- (2) 77.50점
- (3) 71.67점
- (4) 73.00점

47. 이해충돌 사유로 일부 위원을 제외하자 적용 규정이 요구하는 최소 평가인원에 미달했다. 사전에 정한 재구성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는?

지문에서 유효 평가인원이 적용 규정상 최소인원에 미달하고 보충·재구성 절차가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 (1) 이해충돌 위원의 점수를 익명으로 합산해 인원 부족을 보완한다.
- (2) 남은 위원 한 사람을 명부에 여러 번 적어 인원을 맞춘다.
- (3) 평가대상 업체들이 동의하면 적용 규정의 최소인원을 삭제한다.
- (4) 미달 상태로 최종 평가를 강행하지 않고 규정에 따른 보충·재구성 절차를 진행한다.

48. 허용된 협상에서 분석보고서 2건을 추가하고 대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계약 초안에는 새 금액만 있고 추가 과업·기한·검수기준은 이전 상태이다. 보완할 것은?

- (1) 금액만 맞으면 실제 수행할 내용은 업체가 임의로 정한다.
- (2)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기존 제안서의 의무는 전부 없앤다.
- (3) 추가 과업은 회의 참석자의 기억으로만 남긴다.
- (4) 합의된 과업·일정·확인기준과 가격을 같은 계약문서 체계에 일관되게 반영한다.

49. 가상 공고는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입찰가격을 승인된 상한 1억 원 이하로 제한한다. 기술·가격 총점 1위 업체의 입찰금액은 1억500만 원이며 초과가격 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판단은?

상한·초과가격 처리방식은 가상 공고 기준입니다.

- (1) 기관이 상한금액만 지급한다고 일방 통지하면 낙찰요건이 충족된다.
- (2) 총점 1위이면 예산한도가 자동 증액된다.
- (3) 상한초과 업체가 있으면 상한을 적용한 다른 업체의 입찰도 자동 무효이다.
- (4) 최고점이라는 사실만으로 상한 초과가격을 수락할 수 없다.

50. 정식 이의 제기가 가능한 가상 사업에서 업체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문장만 제출하려 한다. 검토 가능한 이의서가 되도록 추가할 구성은?

해당 사업에 정식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 적법한 제출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입니다.

- (1) 오류 주장 대신 다음 입찰의 낙찰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한다.
- (2) 다투는 결정·평가항목, 구체적 사실과 근거,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구분한다.
- (3) 자사 총매출이 크다는 이유로 재평가 없이 낙찰을 요구한다.
- (4) 경쟁업체의 평판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 덧붙인다.

공공계약관리

51. 계약관리 자원이 제한된 기관이 두 공급항목을 관리한다. X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설비로 제작 지연 시 전체 가동이 멈추고, Y는 재고와 대체품이 충분한 소모품이다. 점검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X의 주요 제작 단계와 지연 징후를 더 촘촘히 점검하고 Y는 위험에 맞춰 주기를 정한다.
- (2) 계약금액이 같으면 대체 가능성과 영향에 관계없이 같은 점검만 한다.
- (3) Y는 재고 수량을 확인하기 쉬우므로 관리 시간을 모두 Y에 배정한다.
- (4) X는 대체품이 없으므로 점검해도 의미가 없어 종결 때만 확인한다.

52. 주계약 납품일은 20일이고, 하도급품을 받은 뒤 주계약자의 조립·시험에 4일이 필요하다. 하도급계획은 하도급품 인도를 20일로 정했다. 가장 직접적인 수정 필요는?

일수는 가상 일정이며 기관이 납기 연장을 승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 (1) 하도급품 인도일과 주계약 납품일은 같으므로 일정상 문제가 없다.
- (2) 하도급품을 받으면 조립·시험 의무는 하도급자가 인수한 것으로 본다.
- (3) 주계약자의 후속 조립·시험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도급 인도 일정을 앞당겨 연결해야 한다.
- (4) 하도급계약의 기한이 주계약 납품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53. 계약 이행 중 발주부서가 추가 기능을 요청했다. 계약의 범위·대가·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인 변경관리 방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별 변경의 법적 성립 여부가 아니라 기록·영향 검토·절차 준수라는 일반 관리방향을 묻습니다.

- (1) 요청을 기록하고 변경 사유·범위·비용·일정 영향을 검토한 뒤 적용 절차에 따라 협의한다.
- (2) 추가 기능이라는 이름이면 비용과 일정 영향을 살피지 않는다.
- (3) 담당자의 구두 요청만 있으면 모든 추가비용의 지급이 확정된다.
- (4) 계약 체결 뒤에는 어떤 사유로도 변경을 검토할 수 없다.

54. 물가변동 증액 신청일을 판단한다. 업체는 1일에 “물가가 올라 증액을 원한다”는 공문만 보냈고, 8일에 처음으로 조정요건의 성립을 입증하는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접수했다. 이 사례는 최초 공문만으로 적법한 신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교재 설명을 적용한다. 판단은?

최초 접수가 필요한 최소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8일에 처음 충족했다는 조건입니다.

- (1) 증액을 원한다는 표현이 있었으므로 자료와 무관하게 1일이다.
- (2) 기관이 지급한 날만 신청일이 될 수 있다.
- (3) 요건 입증자료를 갖추어 접수한 8일을 신청일로 검토한다.
- (4) 최종 조정액이 완전히 합의될 때까지 신청일은 존재할 수 없다.

55. 민법 제393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손해를 검토한다. 통상손해 외에 채권자만의 특별한 사정에서 발생한 손해가 문제된다. 그 특별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핵심적으로 확인할 조건은?

- (1) 통상손해가 있으면 특별손해는 어떤 사정에서도 배상할 수 없다.
- (2) 특별손해는 채무자의 인식 가능성과 무관하게 모두 배상한다.
- (3) 채권자가 청구서에 특별손해라고 적었지만 확인한다.
- (4) 채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56. 급식류 공급계약에 시설·서류·생산제품의 현장 확인과 자료제출에 협조할 의무가 적법하게 포함되어 있다. 업체가 “계약서는 체결했으므로 납품 전 이행실태 점검은 일절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제시된 조건에 따른 판단은?

교재의 급식류 계약 사례를 전제로 하며 모든 물품계약에 동일한 점검권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 (1) 점검 협조의무가 있으므로 계약과 무관한 모든 영업자료도 공개해야 한다.
- (2) 현장 점검에 협조하면 최종 납품 규격 확인이 자동 면제된다.
- (3) 계약상 허용된 목적·범위의 이행실태 점검에는 협조해야 한다.
- (4) 계약체결 후에는 이행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모두 소멸한다.

57. 시설 유지관리 계약의 목적은 고장 복구와 정상 서비스 유지이다. 업체는 점검 방문 횟수만 늘었지만 반복 고장과 복구시간은 개선되지 않았다. 성과 중심 평가를 보완하려면?

- (1) 방문 횟수 외에 복구시간·재발·정상 서비스 등 계약목적과 연결되는 결과지표를 확인한다.
- (2) 성과 중심 계약은 이행기록을 남기지 않고 체감만으로 평가한다.
- (3) 방문 횟수가 증가했으므로 결과지표가 나빠도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본다.
- (4) 방문 횟수 대신 담당자의 서명 수만 세어 성과로 확정한다.

58. 업체가 대금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으나 계약상 필요한 검사·인수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급심사에서 적절한 판단은?

- (1) 청구서가 접수되면 실제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한다.
- (2) 청구·세금자료 외에 계약 이행과 검사·인수 등 지급요건의 증빙을 확인한다.
- (3) 청구액이 예산 이내면 다른 지급요건을 검토하지 않는다.
- (4)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성능검사 합격도 함께 증명한다.

59. 물품계약은 설치 후 시운전 합격 때 유보액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제조·운송 대가는 지급했고 설치도 끝났으나 약정 시운전은 아직 하지 않았다. “설치가 끝났으니 지급 정산도 모두 종결”이라는 보고의 수정은?

시운전 합격을 지급조건으로 삼은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 (1) 제조·운송 대금을 지급한 순간 유보 조건은 자동 소멸한다.
- (2) 유보액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기관 수입이 된다.
- (3) 유보액의 해제조건인 시운전 합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고 미정산 항목을 남긴다.
- (4) 시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달력상 월말이면 유보액이 사라진다.

60. 가상 계약의 당초 납기는 9월 10일이었으나 유효한 변경계약으로 9월 14일까지 연장되었다. 납품은 9월 17일에 완료되었다. 지문 규칙상 납기 다음 날부터 납품일까지를 세고 다른 제외기간은 없다. 부과대상 지체일수는?

날짜와 산정 규칙은 가상 계약조건입니다. 검사기간·휴일 등 별도 산정 특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4일
- (2) 3일
- (3) 7일
- (4) 0일

61. 물품 제조 등록을 신청한 업체가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서 생산 관련 확인도 완료되었다고 한다. 교재는 제조 등록에서 공장등록 관련 서류 또는 해당 생산 확인자료 등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적절한 검토는?

구체적인 인정서류·예외의 최종 현행 확인은 별도이며 제조 관련 확인의 독립성을 묻습니다.

- (1)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라고 적히면 모든 물품의 제조 등록이 자동 완성된다.
- (2) 제조 등록을 하려면 공급 등록 업체의 견적서를 대신 제출해야 한다.
- (3) 물품을 판매한 세금계산서 한 장이면 제조설비 확인자료를 항상 대체한다.
- (4) 사업자 존재 확인과 별도로 해당 제조 등록에 필요한 생산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62. 제조사별 모델과 일부 규격은 다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면 어느 제품으로도 기관의 동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이러한 제품들을 정한 범위 안에서 경제적인 가격으로 경쟁시키려는 제도는?

- (1) 유사물품복수경쟁입찰
- (2) 동일 업체의 모든 모델을 무심사로 구매하는 단독 수의계약
- (3) 계약 후 미리 정하지 않은 기준으로 단가를 바꾸는 사후정산
- (4) 수요량을 업체별 공급 희망량으로 나누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63. 가상 소액수의 절차의 가장 낮은 유효가격 업체가 공고에 정한 계약상대자 제외사유에 해당함이 확인되었다. 해당 제외사유는 유효하게 적용된다. 적절한 처리는?

해당 업체의 제외사유와 적용의 적법성은 이미 확인되었고 후순위 검토가 가능한 절차입니다.

- (1) 가격 순위와 별도로 제외사유를 적용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후순위 등을 검토한다.
- (2) 소액이면 공고한 제외사유는 적용하지 않는다.
- (3) 최저가격이면 제외사유가 있어도 상대자로 확정한다.
- (4) 다음 순위 업체의 자격은 확인하지 않고 자동 지급부터 한다.

64. 납품 직전 검사에서 불량률이 반복되어 재작업과 납기 차질이 커졌다. 기관이 완제품 검사 인원만 늘리는 대신 제조공정의 불량 원인과 예방조치를 관리하려 한다. 이 변화의 취지는?

- (1) 불량 발생 후 선별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산 과정에서 품질 문제를 줄이는 예방적 관리
- (2) 공정관리를 시작하면 어떤 완제품 검사도 모두 금지하는 것
- (3) 계약규격을 생산 결과에 맞춰 매번 낮추는 것
- (4) 불량품의 납품을 허용하여 일정만 맞추는 것

65. 가상 변경합의는 원금액 1,000만 원 중 삭제된 물량 200만 원과 조정에서 제외되는 기이행분 30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만 조정률 5%를 적용한다. 세 범위는 서로 겹치지 않는다. 추가 조정액은?

범위별 제외 여부와 조정률을 모두 지문에서 정한 학습용 규칙입니다.

- (1) 40만 원이다.
- (2) 25만 원이다.
- (3) 35만 원이다.
- (4) 50만 원이다.

66. 두 공고 중 A는 진단보고서 1건 작성, B는 1년간 시설의 상시 운영·점검을 요구한다. 이행 범위를 읽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1) B는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공사계약으로 분류한다.
- (2) A의 결과물 완성과 B의 기간 중 지속적 수행 의무를 구별하여 조건을 확인한다.
- (3) A도 B와 같은 수의 상주 인력을 자동 배치해야 한다.
- (4) 둘 다 용역이므로 보고서 하나만 제출하면 이행이 끝난다.

67. 교재가 설명하는 일반적인 2단계 입찰과 규격·가격 동시입찰의 차이로 적절한 것은?

교재에 제시된 일반 규칙의 비교이며 개별 공고의 특례는 별도 검토 대상이다.

- (1) 독립된 가격입찰은 원래의 규격입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성립요건이 없다.
- (2) 두 방식은 제출 시기와 성립 판단이 언제나 완전히 같다.
- (3) 동시입찰에서는 규격 심사를 생략하므로 적격자 수를 셀 필요가 없다.
- (4) 독립된 2단계 입찰의 각 단계 성립 요건과, 유효하게 성립한 동시입찰에서 규격 적격자가 1명 남은 경우의 처리를 구별한다.

68. 기관은 공공시설 운영 개선 목표는 알지만 기술적 구현 방식과 최종 세부 요구를 미리 정하기 어렵고 가능한 대안도 다양하다. 경쟁적 대화를 검토하는 취지로 적절한 것은?

- (1) 참여자와 기술적·재무적 대안을 논의하여 요구와 이행방안을 구체화한 뒤 최종 제안을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 (2) 참여업체가 원하는 대로 기관의 정책목표 자체를 무제한 바꾸기 위해서이다.
- (3) 최종 결과물을 정하지 않은 채 가격만 먼저 확정하기 위해서이다.
- (4) 가장 친숙한 업체만 비공개로 골라 공고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69. 공고가 최종 제출 후 수정·다운로드 불가를 안내한다. 제출 직전 적절한 행동은?

- (1) 제출 후 언제든지 뒤통수 수 있다고 가정
- (2) 최종 파일을 보관하지 않고 모두 삭제
- (3) 의도한 버전인지 먼저 확인한 뒤 제출한다.
- (4) 중요한 내용은 제출 뒤 바꿀 계획을 세움

70. MAS 용역 계약의 검사조건을 찾는데 물품 업무처리규정만 열어 놓았다. 적절한 자료 탐색은?

- (1) 쇼핑몰 사용법만 보면 법령과 계약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
- (2) MAS라는 명칭이 같으면 물품과 용역의 모든 절차·조건이 동일하다.
- (3) 용역 업무처리규정·특수조건 등 해당 대상과 이행 쟁점에 맞는 근거를 확인한다.
- (4) 상위법이 있으므로 특수조건에는 계약이행 관련 내용이 있을 수 없다.

71. 업체 적격성 검토 후 승인 품목에 대해 가격협상을 준비한다. 품목 승인 목록에는 없는 새로운 서비스 범위를 원래 목록에 조용히 끼워 넣었다. 적절한 조치는?

- (1) 가격협상을 시작하면 승인 목록의 기록은 삭제해도 된다.
- (2) 승인 범위의 변경·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확인하고 심사·협상 대상 목록을 일치시킨다.
- (3) 업체가 적격이면 새로운 모든 서비스도 가격협상 대상에 자동 포함된다.
- (4) 새 범위의 가격이 낮으면 품목 변경 절차는 검토할 수 없다.

72. 담당자가 물품의 2단계경쟁 기준표를 보고 서비스 구매에 동일한 숫자를 그대로 적용했다. 적절한 검토는?

- (1) 금액표만 있으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 여부는 관련이 없다.
- (2) 서비스 구매는 금액과 관계없이 2단계경쟁이 존재할 수 없다.
- (3) MAS이면 물품과 용역의 모든 기준금액·예외가 반드시 같다.
- (4) 물품·용역 구분, 해당 품목의 분류, 적용 시점의 기준과 예외를 확인한다.

73.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과 전용물 등록이 완료된 뒤 수요기관이 구매하는 단계이다. 교재에서 설명하는 흐름은?

교재의 기본 절차를 축약한 것으로, 구체적 평가 통과점수나 기간은 묻지 않습니다.

- (1) 제안요청 → 대금 전액 지급 → 최초 심의 선정 → 가격협상
- (2) 필요 서비스 검색·제안요청 → 제안서 평가 → 적격자와 규격·가격 협상 → 납품요구
- (3) 검색 → 업체 광고 확인 → 제안서 평가 없이 자동 납품요구
- (4) 납품요구 → 제안서 평가 → 구매 필요성 검토 → 제안요청

74. 국가기관의 건설공사에서 입찰·계약 절차와 실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의 자격을 검토하려 한다. 법체계에 관한 적절한 접근은?

- (1) 건설업 관련 법령은 민간 건축에만 적용되므로 공공공사와 무관하다.
- (2) 국가계약 관련 규정과 건설업 등록·시공자격 등 산업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한다.
- (3) 건설업 등록을 했으면 입찰·낙찰 절차를 모두 대신한다.
- (4) 국가계약 절차만 지키면 건설업 자격 관련 법령은 적용되지 않는다.

75. 공고는 기관이 주요 자재를 별도로 구매해 지급하고 시공자는 설치만 하도록 정했다. 입찰 내역서에는 그 자재의 구입비가 시공사 부담으로 다시 포함되어 있다. 검토할 핵심은?

기관의 자재 구매·지급과 시공자의 설치 부담이 유효하게 확정된 사례입니다.

- (1) 관급자재의 공급 범위와 도급 내역의 비용 부담이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 (2) 기관이 자재를 지급하더라도 시공사 견적에는 항상 같은 구입비를 더한다.
- (3) 공고와 내역서가 다르면 가격이 큰 문서만 자동 적용한다.
- (4) 관급자재가 있으면 시공자의 설치비도 모두 0원이 된다.

76. PQ 검토 자료로 신용평가, 유사 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경력이 제출되었다. 담당자가 회사의 연간 매출액 하나만으로 나머지 자료를 모두 대체하려 한다. 적절한 검토는?

- (1) 매출액이 크면 모든 유사 공사의 수행실적도 자동 인정한다.
- (2) 각 자료가 보여주는 경영·시공경험·기술능력을 구분하여 정해진 심사항목에 적용한다.
- (3) 신용평가 자료는 기술자 개인의 시공 경력을 증명한다.
- (4) 기술자가 많으면 계약질서 관련 신인도 항목도 확인하지 않는다.

77. 심사자료 ㉠ 동일·유사 공사의 이행실적, ㉡ 유동비율·신용등급, ㉢ 계약질서·성실성 관련 가감요소를 분류한다. 적절한 연결은?

- (1) ㉠ 입찰가격, ㉡ 시공경험, ㉢ 자재수량
- (2) ㉠ 경영상태, ㉡ 신인도, ㉢ 입찰보증금
- (3) 세 항목은 모두 동일한 공사원가 계산서이다.
- (4) ㉠ 시공경험, ㉡ 경영상태, ㉢ 신인도

78. 가상 평가에서는 조정가격을 “입찰가격÷(설계점수/100)”으로 계산하여 낮은 업체를 우선한다. A는 가격 81억 원·설계 90점, B는 가격 76억 원·설계 80점이다. 결과는?

가격·점수·산식은 가상이며 두 업체 모두 최소 설계요건 등 다른 조건을 충족합니다.

- (1) B의 원래 가격이 낮으므로 조정식을 적용해도 반드시 B가 우선이다.
- (2) A의 조정가격은 72.9억 원이므로 A가 우선이다.
- (3) 설계점수는 금액과 단위가 다르므로 주어진 식도 계산할 수 없다.
- (4) A의 조정가격 90억 원이 B의 95억 원보다 낮아 A가 우선이다.

79. 기술용역 사업자 선정에서 ㉠ 업체의 기본 수행능력, ㉡ 참여기술인의 업무 수행 적격성, ㉢ 구체적인 기술제안 내용을 심화해 검토하는 자료를 구분한다. 교재의 용어 연결로 적절한 것은?

- (1) ㉠ PQ, ㉡ SOQ, ㉢ TP
- (2) ㉠ 하자보수, ㉡ 원가정산, ㉢ PQ
- (3) 세 용어는 모두 가격입찰서 한 종류만 의미한다.
- (4) ㉠ TP, ㉡ 입찰보증금, ㉢ 준공검사

80. 하도급지킴이 적용 계약에서 지급받을 업체의 전용계좌를 등록하려 한다. 담당자는 업체 이름만 비슷한 다른 법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했다. 지급 전 필요한 확인은?

- (1) 시스템에 한 번 입력하면 명의 오류도 적법한 변경합의로 바뀐다.
- (2) 금액이 맞으면 잘못된 수취인에게 지급해도 같은 계약의 지급 완료이다.
- (3) 은행에 실제 존재하는 계좌이면 수취인이 달라도 무관하다.
- (4) 계약상 수취인과 계좌 명의·등록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